
제2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17. 9. 21.

국 가 기 록 관 리 혁 신 T/F

제2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2017. 9. 21.(목), 09:30~12:40(190')
-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8층)
- (참석인원) 위원장, 위원, 지원팀 등 20여명
 - 외부(8인) : 안병우(위원장), 심정보, 최재희, 설문원, 이원규, 김창조, 이상민(위원)
 - 내부(7인) : 정책기획과장, 지원팀 등
- ※ 외부 위원 중 조영삼, 임진희, 홍성덕, 이영남 위원 불참
- (회의내용)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분과별 과제(안)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회의록 작성 절차와 공개 관련 >

- (작성절차) 회의록 작성 형식 및 확정 절차 결정 필요(위원장)
 - 회의록 작성 및 확정은 위원 이메일 송부·확인 후 위원장 승인
- (회의록공개) 주요발언 중 비공개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이상민·최재희), 분과회의도 요약 정리된 결과보고는 공개(심정보)
 - 주요 발언 등 회의록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결정(다만, 특정인의 인명 등 비공개 필요한 부분은 제외)

< 분과별 과제 선정 관련 >

- (1분과) 「국가기록관리 폐단혁신」,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국가기록원 기능과 조직 혁신」 3개 과제 추진(심정보)
 - 1과제의 세부주제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록원 내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임. 사안별로 일지작성, 자료 수집 등도 병행 추진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은 중립성 문제라기보다는 기록원의 명확한 입장의 부재였다고 볼 수 있어, 심도있는 분석 필요(이원규)
- 기록원의 아카이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기능(입안설득실현 등)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책임 영역 등 풍부하게 고민 필요(이원규)
- 「1과제」는 백서형식으로 정리하되, 기록공동체 공유(대토론회 등)를 통해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등에 반영 필요(설문원)
- **(2분과)** 국정지 책임성·투명성을 위한 수집·평가정책 마련,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관리체계 재설계(메타데이터 관리, 이관정책) 등 8개 과제(설문원)
 -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문제 등도 검토 필요(이원규)
 - 기록의 분권화라는 입장에서 기록원의 정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방향과는 큰 변화 예상(위원장)
 -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확도 제고 필요(이상민)하고, 그를 위한 조직·인력·인사정책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이원규)
- **(3분과)** 대통령기록의 정의·범위·성립 요건 재정립, 지정기록제도 개선, 대통령 소셜미디어 기록의 보존·선별 방안 등 7개 과제임(이상민)
 - 이관 관련 제도와 운영현황 검토 필요하고, 생산기관의 기록 관리를 위해 수석실 등 각 처리과 전문직 증원 검토 필요(이원규)
 -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인적 요소(시스템적 환경 등)도 검토(이승역)
 - 대통령기록물 및 지정기록물의 정의·절차 등 당면 현안, 누적된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김형국)

< 분과별 과제 조정 관련 >

- <2분과>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기록 자치 실현은 1분과의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과제에서 검토 타당(위원장)
 - <2분과> 7과제(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는 1분과에서 수행하고, 지방자치 부분은 역할에 관한 부분으로 2분과에서 수행하는 것도 좋을 듯함(심성보)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부분은 국정과제로 올해 연말까지 방안이 제안되어야 함(김형국)

⇒ <2분과> 7과제(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정립)은 <1분과> 수행하고, 지방 기록관리의 정상화 과제는 <2분과> 수행하되, <1분과>와 협업 추진

○ 3분과(대통령) 과제 통합 필요, 3분과의 「1번과제(대통령기록 정의 등)는 <2분과>와 6번과제는 1분과와 중복됨으로 협업 필요(위원장)

⇒ 대통령기록관리 생산관리 부분도 개선방안 포함하고, 과제가 중복 되는 과제는 <1·2분과>와 협업과제(3분과 안 제시)로 추진

< 혁신 T/F 활동 공유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

○ (공유·의견수렴) T/F 활동 공유방안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위원장)

→ <기록인대회 조직위>와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기록인대회> 시에 공유하는 것이 좋을 듯함(설문원)

→ 기록인 대회 보다는 11월 중순경 T/F 자체적인 설명회(주제발표, 패널 토의)를 개최하여 공유 하는 것도 검토 필요(심정보)

⇒ 현장의 의견수렴은 분과별로 추진하되, 11월 중순경 별도 설명회 개최

< 기 타 >

○ (위원충원 등) 분과별 위원, 지원팀 조속한 시기에 보충 필요 (설문원·양민 등) → 분과별 위원(2분과 현문수, 3분과 전진한) 및 지원팀 추천 후 충원

○ (자료공유) 분과별 공개·비공개 자료 공유 방안 고민 필요(심정보)

→ 모든 분과 공유 자료는 분과에서 공유 의견을 위원장에게 보고 후 공유

□ 향후 계획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10.13.)

<혁신 T/F 회의록 공개 등>

- 위원장 :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회의장소는 매우 좋음. 지난 번 회의 이후 정책과장님께서 총괄팀장을 맡기로 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주 요청사항에 대한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 총괄팀장 : T/F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심. 협의나 진행 중인 사안을 말씀 드림. 본부 인사기획관과 협의했는데, 법령에 따른 인사를 관장함.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소관이 아님을 답변. 기록원 자체에서 검토하여 장관님 보고 후 추진. 기록의 접근권 문제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이 내부망 관할. 전 부서의 기록물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국정원 T/F에서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안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안으로 국가기록원 지원팀이 필요한 목록 전체를 위원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필요한 문서는 가감없이 제공하겠음. 회의 결과의 주요발언 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혁신 T/F회의 결과 사이트 개설). 소통 공간을 위해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음. 관련 자료를 공유바람
- 위원장 : 과장님 말씀에 대한 추가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음. 이원규 위원께서 처음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 이원규 : 그동안 기록관리 혁신이 20여년이나 되었음. 그 중 기대했던 것만큼 도달한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음. 특히, 국가기록이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 분야에 편향된 측면이 있어 균형감이 없음. 국가기록원의 비전이나 혁신과제에도 민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설정 필요. 민간분야의 기록관리에 관심 필요
- 위원장 : 제1차 회의결과 자료를 보시고 회의록 절차와 공개 양식을 결정해야 할 것 같음. 지난번 회의 시 발언자들이 표기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함. 보고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와 위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이상민 : 보통 이런 경우는 한 번 읽어보고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정 후 최종본을 구두 승인함.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서명도 필요하나 구두 합의 후 승인하시면 될 것 같음
- 위원장 : 회의 끝난 후 본인 확인 절차는 이메일로 송부 후 위원별로 검토하여 승인 필요. 서명은 위원장 등 어느 범위에서 가능할지 이야기 주시면 감사하겠음
- 김형국 : 위원장님만 하시면 될 것 같음. 다만, 결정해야 할 것이 주요 발언내용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의록을 공개할 것인지 결정필요
- 심성보 : 회의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필요

- 위원장 : 어느 정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인지 의견 제시 필요
- 이상민 : 개인적으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주요 발언내용은 공개를 하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 하는 것이 어떨까 함
- 심성보 : 회의 개최 결과, 회의자료, 주요 발언록 이렇게 세 가지로 상정을 하고 그 다음회의에서 공개사항을 자료별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상민 : 내부검토 과정 등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할 수 있음.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위원 중 일부라도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 하는 것이 어떨까 함
- 김창조 : 법의 취지를 봐서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가 가장 타당. 다만, 필요에 따라 비공개 가능
- 최재희 : 속기록같이 작성하되 논의과정에서 비공개정보는 땡땡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위원장 : 원칙적으로는 주요 발언과 회의록까지 공개를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 발언과정 중에 등장하는 특정인의 성명 등은 비공개 처리 필요
- 최재희 : 분과회의 내용은 비공개 하고, 전체회의는 공개 원칙이 타당
- 심성보 : 분과회의도 요약정리된 것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장 : 분과회의 내용은 전체회의 시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위원들 : 동의함

○김형국 : 회의록은 회의 후 일주일 동안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드리고, 검토해서 그 주 목요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심성보 : 9월 28일까지 처리해서 공개. 기록공동체 내부에서 회의 내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함

<분과별 혁신과제 논의>

○위원장 : 1분과 혁신과제에 대해 분과장이 발표하고 논의하면 좋을 듯함

○심성보 : 어제 서울시청에서 1분과회의를 함. 홍성덕, 심성보, 조영삼, 최재희, 안대희, 박성진 참가. 국가기록원 혁신 분과과제를 지난번 회의에서 정해 주셨음. 논의 된 것을 근거로 1, 2, 3과제를 혁신이라고 해서 국가기록관리 폐단혁신,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국가기록원 기능과 조직 혁신으로 구분. 1과제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임. 지칭한 사안들도 가칭임. 중립표현들로 할 것이고, 세부과제들 조사하고 있음. 1차적으로 사안별 일지작성, 자료 수집 등을 미리 해주고 있음.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구해주시고 있는데,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안체계로 공유할 것인가 지원팀에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 분과원들에게만 할거냐. 모두에게 할거냐 등임. 사안들은 기록원 구성원들에게도

아이템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기로 함. 아울러, 자료조사 이후 청취할 것인지, 대면조사 할 것인지 추후 협의

2과제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임. 2과제는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의 기능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임.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체계 부분은 2분과에서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좀 더 큰 NA와 거버넌스 위원회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재희 위원님께서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기초 조사 분석이라도 하자는 의견을 주심. 곧 국가기록원이 자체적으로 미션, 비전수립을 할 때 방안,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것임

3과제는 국가기록원 기능, 조직의 개편의 방향을 정해 보자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국의 NA의 업무기능과 조직, 메가 프로세스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해볼 예정임. 국가기록원 기능 조직 관련해서 기존의 주요 정책, 예시로 부처 전담제, 3관체계 등 정책 결정 문서, 폐지된 내력 등 조직 관련 주요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 제2과제는 2분과하고도 관련성이 있음

○이원규 : 국가기록원의 경우 국가기록관리를 끌고 가는 리더쉽, 정책방향, 제도 영역들, 3과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전문적인 Archives로서의 기능, 프로세스까지 전체적으로 따질려고 함. 국가기록원의 정책적인 영역도 해야 함. 어디에서 어디까지 국가기록원의 책임인지.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설득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조직이 필요

한지 이야기 되어야 함. 3과제는 Archives로만 국한하지 말고, 정책적 기능, 인사 등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함. 기능 조직을 아카이브로 축소하지 말고 정책적인 영역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풍부하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정보 : 2분과와 중복 문제는 2분과 내용을 충분히 청취 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이원규 : 국가기록원의 기능, 조직이 2분과와 연결되는지?

○설문원 :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새롭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정책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음. 1분과에서는 1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음. 1과제는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 정리하자는 것임. 백서발간 등으로 잘 정리해서 윤리강령 등에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성찰들이 필요한지 기록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앞부분은 사건별 검토를 하지만, 대토론회 등을 통해 윤리적인 쟁점을 분석, 기록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원규 : 1과제는 섬세하게 정리필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것이 국가기록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해친, 적폐로서 국가기록원이 활동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는가? 국가기록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변적인 문제일수 있음. 정치권의 문제든지, 물론 그럴 때 국가기록원이 명확한 입장을 못가졌다든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도,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라고 단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 있음

○최재희 : 이외에도 추가해서, 분류해서 추진해 갈 예정임

○김창조 : 국가기록물의 중요도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집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행정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기록 관리 필요. 소통과 참여를 위해 바닥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이상민 : 11월까지 6번 더 만나서 논의하는 것임. 운영위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임. 지원팀에서 실무적인 작업들을 하겠지만. 국가기록관리와 공공기록관리를 같이 봄. 1분과에서 2, 3과제를 포괄할 수 있을지, 동시에 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 듦. 1과제가 핵심적인 것인데, 기록원의 폐단이 아니고, 국가기록관리의 폐단임. 국정원에서 유출했다거나, 청와대에서 유출했다거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백서 만드는 수준으로 하면 될 듯함. 우리가 조사관도 아님. 1과제도 사실 우리에게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서발간이 결과일 것임. 중립성의 문제, 정치적 문제, 현실정치에 휘둘리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누구나 이 문제에 천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음. 나머지 2, 3과제는 2분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함. 인원을 더 보충해 서라도 했으면 함. 3분과도 과제범위를 정해놓고 추진할 것임

○김창조 : 분과별로 진행해 보고, 향후에 조정해도 될 듯함

○심정보 : 1과제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으면 2분과 과제를 먼저 듣고 했으면 좋겠음

○설문원 : 위원 한분이 사퇴하셨음. 조속한 충원이 필요함

○위원장 :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연창위원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사퇴하시겠다고 하심. 저와 설문원 선생님께 사퇴의사를 밝힘

○설문원 :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과 발표하겠습니다. 방향을 여덟가지로 잡았음. 첫째, 국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어떤 수집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 판단했음. 국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특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공과 민간을 포괄해서 수집할 수 있는 수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는, 공공기록관리 체계가 생애주기 기반으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연속체적인 관점을 적용해서 관리체계를 재설계해야 함. 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데이터의 흐름, 기록물 이관상의 문제가 존재. 디지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날로그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효율화해야 할 것임. 셋째, 전자기록 관리, 특히 제가 서비스부장으로 있으면서 절감했던 부분인데 기록관리를 겉으로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자체가 문제가 많음. 정부3.0, 4.0 이야기하는데, 기록원의 데이터와 기록이

공개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함. 이는 행정직 원장이 있을 때는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것임.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임. 공유 개방을 위해서는 공개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맞물려 있어 함께 보완되어야 함

넷째, 기록관은 생애주기 두 번째 단계에 해당.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부문에 해당. 기록관이 전문성을 높이고, 기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역할부분을 재정의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섯째, 매우 다양한 디지털 기록이 생산되고 있고 기록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를 위해 기록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으나, 본격적으로 장기보존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이를 통해 디지털 정책, 디지털 역사역량 축적 필요. 공공기록으로 외에도 이메일, SNS와 같은 기록도 포괄되어야 함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과제들을 상정함. 일곱 번째 과제는 1분과와 겹쳐서 1분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문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여덟 번째, 지방기록관리의 정상화를 통해 시민과 주민이 체감하는 기록자치를 실현해야 함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록공개정책이 빠졌음. 공개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들어가야 해서 논의를 거쳐 보완 예정임. 뒷부분은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들로 아직 논의 중이므로 세부과제 완성이 필요하므로 참고 필요

- 김창조 : 공개는 수동적 공개와 능동적 공개가 있는데 수동적 공개는 신청에 전제로 한 것임. 능동적 공개는 공표라든가 하는 것인데, 3번째 과제에서 처리할 수 있을 듯함
- 이원규 : 결국 법령의 정비와 관련된 것인지? 공공영역만, 민간기록도 있고, 다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음. 보안문제도 있음
- 설문원 : 공공기록 관리 영역을 개선하는 것임. 전체적으로 분절적인 틀을 바꾸자는 것임. 국가기록원이 어떤 정책기능을 해야 할지 지금과는 다른 틀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 : 2분과 과제는 큰틀에서 기록의 분권화 취지인 듯함. 기록원은 정책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고. 지금까지 기록관리가 지향했던 것과는 상당히 큰 변화를 염두해 둔 것으로 혁신에 해당함. 1분과와 관련해서, 7과제를 1분과로 드리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상민 :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우선순위에 따라 역량을 집중시켜 개선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음. 협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아카이브를 하고 싶어 함. 폐기하고 이관한다고 기관의 기록물을 분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 체제가 중앙집권적인데 법이 행정기관 조차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 국가기록원이 행정안전부의 소속으로 있는 한 아카이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역사기록을 아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가함. 차라리 기관에서 기록을 다루면서, 기록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행정기관 전문가들

에게도 아카이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기관 자체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설문원 : 2분과 과제는 장기, 단기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고려 검토할 예정

○김창조 : 국가기록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청 정도로 조직을 독립시킬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과제라도 검토할 필요 있음. 현 정부차원에서는 지방기록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 필요. 또 너무 시미시적 부분까지 수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이상민 : 3과제 데이터 품질에 대해 데이터가 안 나오거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 필요한데, 전문가 얘기로는 데이터 정확도 오류가 0.02%이상이면 안되는데 최소한 0.2%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사실 정확도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름. 그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중요함

○이원규 : 국가기록원 데이터에 대한 정보 관리체계나 수준을 평가해야 할 필요 있음.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18년 추진하는 것도 가능

○김형국 :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품질사업을 했음. T/F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정보화과에서 한 용역도 있음. 두 개의 결과물을 공유하겠음

- 이원규 : 1분과 영역과 관련해서도 기록원의 조직, 기능, 인사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 데이터 품질이 나쁘다 그 결과보다는 그런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깊숙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그 문제에 대한 원인, 결과를 통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함
- 설문원 : 생산자에 이관기관이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데이터 오류가 많음. 품질평가원은 기술적인 부분만 봄
- 김형국 : 품질용역 결과 유실 데이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생산단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넘기면서 유실됨. 특히 시스템 이관 시 데이터가 이관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되면서 오류가 많이 생겼음
- 설문원 : 메타데이터 재활용이 필요. 예를 들면 공개관리 업무 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결과 데이터들이 기술(記述) 데이터에 반영되어야 함. 데이터 관리 제대로 하면 최종적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해 짐.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한 평가분석 및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럴 경우, 시스템 효율화가 가능
- 김창조 : 작년 4월 빅데이터법이 만들어졌음. 4차 산업의 핵심인데 아직 일본에도 이런 법이 없음. 메타데이터의 재활용 등 강화가 필요함. 또한 알 권리 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설문원 : 잊힐 권리라고 해야 할 것 같음. 기록관리 입장에서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 기록물통합검색시스템을 기록원에서 오픈했었는데, 개인정보 등이 무작위로 추출되면서 시스템을 다시 내린 사례가 있음. 잊힐 권리는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끊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책 반드시 필요

○위원장 : 1분과와 과제 겹치는 문제는?

○심성보 : 공개 관련된 과제는 정보공개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설문원 : 포괄하고 있음

○심성보 : 2분과 7번과제를 1분과로 옮기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재희 : 2분과와 1분과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서로 충돌 나는 부분이 있음. 1.5분과 비슷한 논의가 필요. 기록관 역할 분담 등

○심성보 : 조직, 기능에 대해 1분과와 2분과 접점을 찾는 것은 향후 논의를 통해 처리, 7과제는 1분과로 가져올 것인지. 1분과는 위에서 볼 수밖에 없고, 2분과는 현실적인 지점에서 볼 수밖에 없음. 1.5는 통합해서 논의 필요

○최재희 : 예를 들면 저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2분과에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 충돌부분이 있음

- 김형국 : 1분과 2분과의 개편방향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1분과에서 가안을 만들되, 전체가 토론을 해야 하는 과제인 듯함
- 위원장 : 1분과가 지금 어떤 것을 검토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음
- 심성보 : 최종 산출물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 설문원 : 방향과 세부과제, 세부과제 추진 시 당면과제냐 아니냐 등이 나올 듯함
- 이원규 : 과제가 많아서 위원충원 필요함 8과제면 8명 필요
- 이상민 : 3분과에서 과제 7개 도출. 과제가 많지만 짧은 시일 내에 방향성과 핵심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어떤 부분은 법률개정안까지 필요. 지원팀도 자유롭게 발언하고 논의하여 정하였음. 참고사항은 그간 경과, 논의필요사항 등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님을 공지함
 1과제는 대통령기록의 정의, 범위, 기록 성립 요건의 재정립으로 했음.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최근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개선이 최소화 될 것임
 2과제는 지정기록제도 개선인데 지정기록제도에 대한 법령 미비사항을 검토해야 함. 지정제도의 폐기까지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미국의 헌법상 대통령 특권에 대한 것을 잘 모름. 지정기록물에 대한 오분류에 대한 검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함. 그러나 전제조건은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가능. 제도개선안을 내거나 법 개정을 할 때 전제조건으로 중립성을 갖는 기관인지가 굉장히 중요. 세부과제 중 소셜미디어 기록 중 대통령과 자문위원 간의 비공식 논의 내용 등도 지정기록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설문원 : 소셜, SNS는 공개, 오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메일, 카톡 메시지 등은 인스턴트 메시지라고 함

○이승익 : 정부의 보안이나 비밀, 그 밑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소통 과정, 이메일 등도 외국에서는 기록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강구 필요함

○이승익 : 지정기록 안에는 정부의 보안이나 비밀 등 국가안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치인으로 대통령 개인이 의사소통했던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등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들 중 지정기록물 취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 :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라 용어상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이상민 : 3과제는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임. 대통령 기록 생산기관과 관리기관에서 관리와 접근에 대한 부분으로 선별도 넣음. 선별한다는 범위 안에 평가를 통해 영구기록을 선별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본을 확정하는 것 등에 대한 법령, 업무절차 등이 없음. 대비실 내에

기록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식별하는 것임. 4과제는 기록관리 법령과 원칙에 부합하는 업무, 기록시스템의 요건과 기술(Tech)정의임. 전자적 환경에서의 요건 등을 제시하고자 함. 시스템에 의한 정치적 악용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5과제는 장기과제로 당장 세부과제를 넣을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과 정당성 정도만 제시할 예정임. 6과제는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 전문성 보장은 국가기록원의 중립성, 전문성과 궤를 같이 함. 따라서 1분과와 같이 논의하는 것이 타당. 조직, 직제, 권한, 책임, 전문가 윤리에 대한 재교육 등을 다룰 예정임. 중립성 보장은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관리에 학식과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으나 모호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이 계속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역할이 미비했음. 7과제는 대통령 유고 시 기록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 대통령기록관리 방안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유고 시 대통령기록이 연속적으로 중단없이 관리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음. 대통령기록이 유실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논의 필요

○이원규 : 개헌을 추진 한다는데,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될 것인가? 논의 필요

○이상민 : 수상기록과 비슷하게 감

○이원규 : 이관에 대한 부분도 검토 필요. 법에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보면 다 넘기는 것은 아님. 하지만, 관행적으로 다 넘김. 지금처럼 보존기간 1년부터

데이터셋 등 모든 것을 다 넘길거나. 지정기록은 넘겨야 할 것임. 이관 작업도 연관시켜 봐야 할 듯함. 또한 대통령 기록 관리를 위해 수석실 등 각 처리과에 전문직 증원이 필요. 각 대통령기록 생산부서에 전문직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

○이상민 : 각 비서관실에 파견하는 문제 넓은 의미에서는 찬성하나 실무적으로 파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높음

○위원장 : 정책실, 안보실에 두는 것도 방법임

○이원규 : 생산하는 처리과에 배치하자는 것임

○이승억 : 검토는 할 것임. 청와대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기관으로 사람을 배치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비인적 요소, 특히 전산자료 등은 사람이 배치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 기술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축적하는 부분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남겨서 등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러한 환경을 인지하고 있다가 기록원과 국정비서관실이 인지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 관리할지 검토 필요

○이승억 : 임진희 위원 제안한 것은 등록에 대한 구체적 행위, 요건이 무엇이나? 디지털시대는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임.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그럴 경우 생산 당시 담당자는 기록인지 아닌지 고민

할 것임. 생산하는 사람은 일에 집중하되 기록물은 시스템에 축적되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 필요함. 비서실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 필요

○이승억 : 기록이 남는 것은 매커니즘에 따라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문서정리 할 때를 고려 해 보면 문서를 생산할 때는 많은 양의 정보가 있으나 문서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엄격하게 선별할 경우, 문서가 남을 것인가 문제가 있음

○이상민 : 우리 T/F에서 모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문제과악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모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 연구하려면 시간이나 자원을 더 지원해 줘야 함

○이승억 :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겠음

○설문원 : 과제5는 무엇인지?

○설문원 : 과제명 재정립 필요

○김창조 : 전체 기록관리 역량에 대해 교수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긍정적이나 대통령기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음

○이승억 : 전자기록 환경에 맞추어 개별 대통령기록관, 통합기록관 새로운 기록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김형국 : 3분과는 디테일한 부분이 더 필요함. 대통령기록물, 지정 기록물의 정의, 절차, 당장 현안 등이 발생하고, 누적된 문제점 등이 있음. 이를 다루는 것이 과업임

< 휴식 : 10분 >

○위원장 : 속개하겠음. 일단 분과별로 과제를 조정하면 어떻겠나 생각함. 1분과 제2과제가 2분과 혹은 전체적으로 큰 주제 이므로 2분과와 합동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논의 필요. 2분과의 과제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7과제는 1분과로 통합하시면 좋을 것 같음. 덧붙여서 지방기록자치 실현도 1분과로 넘겨서 국가기록관리체 혁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

○최재희 : 1분과는 현황진단과 문제점 도출이라고 생각함. 1분과의 2과제는 2분과가 어떻게 생각함. 문제점 진단은 1분과에서 하고 방향이나 개선점은 2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 1분과에서는 현황도출과 문제점 진단, 2분과에서 방향, 개선점 도출로 역할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함

○설문원 : 2분과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됨. 문제점 도출에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 같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2분과 7, 8번 과제하고, 1분과 2, 3과제를 묶어서 새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함

○이상민 : 실질적인 위원 및 지원팀 충원이 가능할지?

○이원규 : 과제명 재조정 시 1분과 분과명 재정립 필요. 1과제가 국가기록원 혁신임

- 심성보 :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비서실 기록관, 생산기관의 기록관 현황과 조직, 향후의 지속성 문제도 떠 있는 부분임. 기록관리 부분을 3분과 쪽에서 넣는 문제 중요
- 위원장 : 대통령기록은 3분과에서 처리 필요. 1분과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방안을 하고, 2과제에 대해서는 2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지방기록 자치는 1분과 3과제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듯함. 큰 틀에서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음
- 심성보 : 2분과 7과제는 1분과로 넘기고 2분과 8과제는 2분과에서 처리. 5과제까지는 프로세스, 6과제는 전문성, 8과제는 역할에 관한 것임. 2분과 7과제만 1분과로 넘겨 진행하는 것도 필요
- 최재희 : 헌법기관에 대한 기록관리도 포함 필요
- 김형국 : 국가기록관리 개편 방향에 들어가 있었음. 2분과의 과업범위는 아니었음. 지방기록자치 부분은 원래 1분과 영역이었음
- 심성보 : 2분과의 7번 과제는 1분과로, 8과제는 2분과 유지
- 설문원 : 1분과에 8과제 전문가가 있음
- 심성보 : 조영삼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줄 수 있다고 함

- 위원장 : 헌법기관에 대한 기록관리는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 최재희 : 2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함
- 김형국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강화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안이 나와야 함.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위원장 : 1분과, 2분과 과제는 정리가 된 셈임. 3분과는 과제를 통합하는 것도 타당. 범위에 비해 가지 수가 많음
- 이승억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부분을 개선방안에 포함해서 진행 하겠음
- 위원장 : 과제를 통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이상민 : 과제8 안에 과제7을 세부과제로 포함시키겠음. 대통령기록관 모델정립 모색. 시민과 소통강화, 디지털 강화 등은 시기적으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과제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음
- 위원장 : 제3분과 과제6의 대통령기록관 중립성 문제의 경우, 1분과 제1과제와 연동됨
- 이승억 : 협업과제로 1분과 3분과 공동처리
- 이상민 : 3분과에서 안을 내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추진. 3분과 1번 과제의 경우도 2분과와 중복되므로 협업과제로 처리

- 위원장 : 과제는 대체로 정리가 된 듯함.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는가?
- 김창조 : 전체 기록관리의 방향성, 대원칙 등에 대해 헌법기관을 포함해서 1분과에서 논의하시는 것은 어떤지?
- 김창조 : 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안되는 것도 폐단인지? 정상화가 필요한 것임. 1분과에 폐단이 있음
- 박성진 : 1분과 1과제 내용 중 폐단의 정의가 필요함. 문제가 컸거나, 하는 것만으로 폐단으로 볼 수는 없음
- 위원장 : 모든 것을 다 답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하여, 그 중심으로 폐단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 기준은 법령, 기록 전문가의 윤리강령이 중요할 것임
- 박성진 : 우선 기록원내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폐단 관련 부분을 보고 드리겠음. 공식, 비공식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겠음

< 혁신 T/F 활동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 위원장 : 과제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음. 향후 일정에 대해 우선, 워크숍, 토론회 등을 10월말쯤 개최하는 문제, 현장 전문가들과의 논의시간 등에 대해 일정을 결정 필요. 어떻게 정하시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설문원 : 기록인대회가 11월 3~4일인 만큼 그 때 하는 것도 가능

- 이상민 :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주제임. 1, 2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부에 넣어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함. 다만, 조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
- 최재희 : 11월 3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 학자 등과 토론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심성보 : 각자의 자주성이 있음. 기록인대회는 주관단체 자주적 행사인데, 현장에서 기록관리 미래를 본다는 것임. 우리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한번 있고, 대회에서 T/F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닐 듯함. T/F 주관의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설문원 : 이미 일정들이 다 짜져 있으면 못하는 것임. 10월말까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음
- 최재희 : 11월 5일부터 ESTICA 회의가 또 있음
- 심성보 : 의견을 들을 경우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함. 11월 13일주 정도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결과를 정리한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함
- 김창조 : 일하는 순서는 의견 청취 후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하는 것이 타당

- 설문원 : 전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알리는 것은 기록인대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의견청취는 큰 규모가 되면 어려움. 기록연구사 중 선수들을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10월말 중 하면 좋을 듯함
- 이상민 : 기록원은 별도로 청취하는 것이 필요. 대통령분과는 기록원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
- 김형국 : 분과별로 현장전문가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함. 구성원이 많으면 충분한 이야기가 어려움
- 위원장 : 현장 연구사 만나는 것은 분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위원들 : 동의
- 설문원 : 전체적인 발표는 기록인대회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 전체 발표를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록인대회를 통할지 정할 필요가 있음
- 심성보 : 기록인대회의 경우,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을 사용할 경우, 기록인대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음. T/F 차원의 성과 중간보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위원장 : 대규모의 경우, 우리의 설명 내지는 홍보 위주로 될 가능

성이 있고, 전문가 섭외를 통한 토론의 경우는 심도 있는 논의 가능

○심성보 : 관심을 광범위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주제발표, 패넬토의를 하는데, 패넬은 각 기관별 전문가들이 하면 좋을 듯함

○위원장 : 기록인대회 시에 잠깐 설명을 하는 것은 가능할 듯함

○김형국 : 다수의 군중이 모인 곳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듣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듯함

○위원장 : 10월 말쯤 해야 할 듯함. 11월 중, 하순은 너무 늦음

○심성보 : 10월말은 우리가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 11월 중순쯤 하는 것이 좋을 듯함

○김형국 : 현장전문가는 분과별로 하고 설명회는 11월 중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설문원 : 11월 중순에 하고, 11월 중순 전에 분과별 의견수렴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위원들 : 동의

○위원장 : 다음으로 위원 보충 문제를 논의하겠음. 2분과 이연창 교수님이 추천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음. 추천자는 현문수 박사임. 개인의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위원들 : 찬성

○위원장 : 3분과 충원은 어떻게 하실지?

○이상민 : 알권리연구소 전진한씨를 추천함

○최재희 : 개인 의사 확인 후, 기록원 등에 위촉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될
듯함

○위원장 : 하신다고 하면 논의를 하고 아닌 경우는 제외, 2분과에
위원이 더 필요 하실지도 논의

○이상민 : 2분과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음. NA의 역사기록에 고민
이 빠짐. 세부과제로 포함되어야 함

○김형국 : 꼭 필요할 경우, 위원 추가는 당연하지만, 위원이 많아지
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과제를
잘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 저희 지원팀도 분과별로 나
누어 이야기 해, 보장되어야 함

○이원규 : 1분과 쪽에서 추진

○이상민 : 주요 과제가 아닐 경우 세부과제라도 포함필요

○심성보 : 마지막 한 가지 자료 공유문제 논의 필요함. T/F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개, 비공개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공유되는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음

○박성진 : ICA, 대화록 등 내부 문건이 있음. 공개, 비공개가 섞여 있음. 1분과 전체위원들과 공유문제임

○심성보 : 분과하고 위원장에게 한다. 모든 분과에 공유하는 자료는 위원장에게 같이 공유한다. 분과에서 공유하겠다고 의견을 위원장님에게 이야기 하고, 공유 필요

○이원규 : 2분과 관련 연구프로젝트 결과 등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 2차 회의를 종료하겠음. 다음회의 안내 부탁

○안대회 : 10월 13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3차 회의 개최됨

○위원장 : 그 사이에 분과회의 부탁드림